

第261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8月22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3. 2005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審査된案件

- | | |
|--------------------------------|---|
|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1 |
|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
|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
|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
| 3. 2005회계연도 기금 결산 | 1 |
|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

(14시03분 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현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3. 2005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14시05분)

○**委員長 權哲賢**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

2항 2005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금 결산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국회가 심의·확정해 준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요구토록 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재정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데 반해 교육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예산의 확보만큼이나 교육예산이 헛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심사를 통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결산심사

에 교육부총리가 공식으로 인해 교육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현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혁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교육의 기회균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예산액 3조 8362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한 3조 835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교육세 세입액이 3조 5266억 원으로 총 세입액의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조 97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조 7937억 원으로 총 세출액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초·중등 교육 부문에 24조 3253억 원, 고등교육 부문에 3조 3899억 원,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에 2579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64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9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 결산의 부문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 교육 부문은 학교교육 내실화에 356억 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러닝 지원

체제 구축 운영 등에 213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에 976억 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1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고등교육 부문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대학구조개혁 등에 총 33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대학 특성화분야 집중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에 2587억 원, 대학의 연구능력 활성화 및 순수 기초연구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30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은 정책 연구개발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97억 원, 평생 및 직업교육 진흥에 1858억 원, 국제 및 재외동포 교육 지원으로 6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정액수당 지원에 117억 8900만 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2억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그리고 2005년도에 신설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6조 1403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교직원대여사업, 공공자금예탁 및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21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학시설용자금, 재특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차상환 등으로 운용하였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1206억 원을 조달하여 학자금대출 이차보전지원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업무보고 이후 바뀐 교육인적자원부 간부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입니다.

변창률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지한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입니다.

유선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입니다.

임승빈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 규모 및 회계별 결산 내역, 세입세출결산의 특징, 주요사업 추진실적, 세출예산 이체·이용·전용 내역, 세출예산 사고이월 내역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결산 규모는 세입이 예산액 3조 8362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한 3조 8354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8조 965억 원 중 99.6%인 27조 973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2005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3조 8362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조 836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자의 재력 부족 등으로 3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보다 0.4% 증가한 28조 965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28조 965억 원의 99.6%인 27조 9731억 원이며 이월액은 645억 원으로 2004년도 대비 3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0.2%인 5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박경재 실장!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예.

○**委員長 權哲賢**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5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특징부터 해

서 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동 회계의 세입재원인 교육세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경기 부진으로 교육세 세입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473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과학기술부사업을 이관하여 순수기초연구 집중육성사업에 97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99년부터 추진한 BK21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10개 대학을 통폐합하였으며,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한 것 등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실적입니다.

인건비 지출액은 1조 3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기본사업비는 2005년 지출액이 2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 부문은 24조 325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먼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총 356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15억 원,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에 29억 원,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6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2억 4200만 원, 초·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에 16억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에 218억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43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해서 21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e-러닝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59억 5000만 원, 교육방송 인터넷강의에 137억 원,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에 1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359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1억 2300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강사 초청에 9억 2200만 원, 교

육대학 육성에 26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3291억 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보수에 5억 9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에 976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에 867억 원, 장애아교육 지원에 95억 4800만 원, 장애학생 통합교육기반 구축에 4억 8900만 원, 장애인 교육복지기반 조성에 7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1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방학캠프 운영에 10억 3500만 원,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에 60억 6500만 원,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에 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사왜곡 대책을 위해서 72억 3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왜곡 대책에 60억 원,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10억 3400만 원, 동아시아 평화원년 캠페인에 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3조 793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 1조 790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3329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850억 원, 대학 구조개혁에 800억 원, 대학 특성화 지원에 600억 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64억 원, 대학 경쟁력 강화 평가에 14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지원 강화를 위해서 258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1931억 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에 106억 원, 산학협력체제 활성화에 450억 원,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학의 연구능력 활성화에 2273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술연구 조성에 2263억 원, 외국인 교수 초빙에 10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순수기초연구 집중 육성에 769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선도 과학자 육성 지원에 40억 5000만 원, 젊

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에 94억 원이 집행되었고, 여성 과학자 지원에 85억 원,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에 162억 원, 신진 연구자 연수 지원에 80억 원,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치활동에 10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2906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차보전에 1061억 2200만 원,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689억 원, 교육차관사업에 725억 7000만 원,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5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에 4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대학교육 정보화 지원에 126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32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사학진흥기금에 25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 3959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립학교 시설 확충에 2707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704억 7300만 원, 국립대 이전사업에 264억 4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립대학 운영 지원에 1015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수 보직수행 경비에 175억 8900만 원,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에 433억 700만 원,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에 209억 3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립대병원 지원에 651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121억, 기타 국립대병원 지원에 82억 9500만 원, 강원대병원 신설에 14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국립대병원 신축·이전에 415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하기관 지원에 414억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술진흥재단 출연에 93억 3600만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에 108억 4900만 원, 민족문화추진회에 37억 2900만 원, 사료의 조사 및 수집·보존에 19억 14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료의 연구·편찬 및 간행에 22억 500만 원, 사료관 증축에 74억 1400만 원, 반민족행위 연구에 4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에 30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에 2578억 9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97억 1900만 원, 이 중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에 12억 7600만 원, 인적자원 통계정보체제 강화에 19억 7200만 원, 정책의 연구·개발에 24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 7억 6200만 원, 영재교육 강화에 3억 3000만 원, 지식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 활성화에 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생 및 직업교육 진흥을 위해서 1858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24억 8100만 원, 전문대 특성화 지원에 1679억 5000만 원, 전문대 워크 스터디(work study) 프로그램 지원에 80억 원, 전문대학 자율역량기반 조성에 8억 9000만 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에 18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5억 원,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에 24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제 및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위해서 62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에 287억 3200만 원, 국제교육 교류협력 지원에 35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7억 2300만 원,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지원에 10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한인학교 지원에 10억 원, 국제교육진흥원 책특회계 전출금에 16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문별·사업별 예산액, 이월액 등 결산현황은 62쪽 및 6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이체·이용·전용 내역입니다.

이체·이용·전용액은 모두 1217억 원으로 이체액이 13억 6800만 원, 이용이 126억 8500만 원, 전용이 107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644억 9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립학교 시설 확충 등 일반회계가 92억 원이고, 국립대 이전사업에 84억,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468억 원 등 64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21억 7100만 원으로 정액수당 지원이 117억 8900만 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기성**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조 965억 원이며, 이 중 99.6%인 27조 9731억 원을 집행하였고 64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58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 부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총 23조 793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보통교부금으로 23조 33억 원, 특별교부금으로 7904억 원이 전액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었으나 동 교부금 재원 중의 하나인 교육세의 결손이 매년 반복됨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세는 주세, 특별소비세 등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장률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최소 약 1000억 원에서 최대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교육세 결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세의 결손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2005년도 말까지 발행된 지방채 규모는 약 2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수 추계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육세의 세목을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세목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2005년 11월 8일과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재정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1912억 4882

만 원을 총액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 수요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재정보전을 이유로 특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경우는 초·중등 분야의 주요 사업과 별 차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일반회계의 타 주요 사업과는 달리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행할지가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국회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동 시책사업 비율의 축소·조정 및 보고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보면 현안사업 수요의 경우……

○김영춘 위원 몇 쪽이에요?

○전문위원 구기성 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수요의 경우 2005년도 12월 28일에 전체 현안사업 지원액의 30%에 해당하는 709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05년도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안사업 수요의 자금 교부시기를 1월 31일, 7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 수요의 교부시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법정 의무부담 비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도 일반회계 미납액 누적액이 1조 39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률에서 정한 경비 부담조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그 자체가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시·도의 경비 부담을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방송 인터넷강의사업과 관련하여 EBS는 교재 판매수익금으로 2004년도에 186억 원, 2005년도에 117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감사원의 재무감사 결과 2004년도 수능교재 판매수익금 중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는 13억 7000만 원만을 투입한 반면에, 직원 성과급으로 43억 원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 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교재 판매수익금의 부적정한 집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인 EBS는 교재 판매대금의 잔여 수익금에 대하여는 교부조건에 맞게 수능강의 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교육부는 교부조건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신축사업은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총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설계비 예산 6억 300만 원의 55%인 3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 23%인 1억 3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택공사의 토지수용 절차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2006년 7월 현재까지도 주택공사의 토지수용이 늦어져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주택공사와의 가계약 당시 부지매입 비용은 택지조성 완료 후 산정되는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추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주택공사의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한 택지조성원가의 상승으로 2006년 7월 현재 총 사업비에 당초 예산액보다 240억 원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매입이 늦어질수록 조성원가 및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의 추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청사이전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약 17.5%가 다음연도로 გადა 이월되어 집행되고 있는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동일 사업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들의 대응투자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성실히 대응투자 조건을 이행한 자치단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응투자 실적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 확대와 함께 관련 예산의 지방이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이양 후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고지원 시와 비교하여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분야의 실적 저하 또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교원평가제도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된 67개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각 2000만 원씩을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채 지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은 교원평가 반대자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향후 시범운영 확대 시 예산상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고등교육 부문 사업비 예산은 총 1조 909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1조 790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은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사업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도 예산은 총 800억 원으로 이 중 463억 71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4년도 지원 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평균 32억 원을 4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단년도 지원 대학에 대해서는 평균 6억 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보면 최종 평가점수 60점 이상 되는 14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 중 상위 8개 대학은 다년도 지원대상으로, 하위 6개 대학은 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중 단년도 지원방식은 구조개혁에 선도적인 대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동 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소액의 예산 지원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에 큰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단년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각 대학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실적 또는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구조개혁 또는 특성화와 관련이 적은 노후 교육시설·환경 개선이나 세미나 경비 등 목적 외로 집행되는 사례가 여러 대학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이들 대학에 대해서도 2006년도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인바, 특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면 근거 법률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사업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2005년도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한 1단계 BK21사업의 최종연도 사업으로서 총 1850억 원의 예산 중 700만 원의 불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BK21사업의 평가 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각 학문분야별 세부분야에 대하여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유의 평가항목을 개발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처럼 그 성격이 판이한 대분야별로도 평가항목 및 배점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바, 이는 평가의 타당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어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에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탈락한 4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BK21사업의 지원사업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NURI사업의 경우를 보면 연차평가 결과 탈락한 사업단에 대하여 향후 추가사업단 선정 등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BK21사업도 NURI사업과 같이 중간평가 결과 탈락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단 선정 참여를 제한하거나 선정평가 시 감점을 주는 등 평가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단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지방대학 핵심역량 강화사업은 2005년도에는 2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 중 1931억 원이 지출되고 468억 원이 이월되었는바, 이월액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가 그 원인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대학 핵심역량 강화사업과 지역인적자원 개발기반 구축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각 세부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대학 핵심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연차평가 결과 선정 취소된 사업단에 대한 집행잔액 환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리사업은 1차 연도인 2004년에 총 2200억 원의 예산을 112개 사업단에 지원하였고, 그 집행실적에 대하여 2005년 8월에 연차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수 유지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요건심사를 6월에서 7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사업단이 요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연도 지원예산의 10%인 189억 4300만 원을 연차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각 사업단에 우선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실시한 연차평가에서 7개의 사업단이 선정 취소되었고 이들 선정 취소된 사업단은 1차 연도 지원 예산인 71억 9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 사업단에 우선 교부된 2차 연도 사업비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각 사업단별로 집행잔액만을 반납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요건심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차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연도 사업비의 10%를 선교부할 필요성은 적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선정 취소된 각 대학별 2차 연도 사업비 집행 상황에 따라 반납한 잔액의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바, 선정 취소된 대학들에게 교부된 2차 연도 사업비

의 선교부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선정 취소된 사업단에 속한 학생·교원·임시직원들에 대한 장학금 및 인건비를 다음 한 학기에 한해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및 평가 후 후속조치의 엄정성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만이 각각 15억 3000만 원과 5억 3000만 원의 지방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시·도는 전액 국고로 집행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 9억 4000만 원의 대부분은 센터 직원의 인건비이고 이들 직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원에 속해 있는바, 그 인건비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임에도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사업은 시·도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학술연구조성사업 중 2005년도 신규사업인 STAR-FACULTY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비의 45%인 2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인 26억 7500만 원은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2005년 12월에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매우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연구자를 최대 10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 국가차원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나 실제 동 사업에 대한 신청자들을 심사한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 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결국 11개 과제에 총 사업비의 45%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은 동 사업이 신규사업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수요 파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향후 이와 같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수탁사업비 중 약 2.8%인 88억 6700만 원을 사업운영비 성격인 심사평가운영비로 책정하여 이 중 6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그런데 동 운영비는 위탁관리비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에도 동 운영비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인건비, 주요 보직자 수당, 기관 홍보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동 출연금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도 이전과 달리 2005년도에는 동 출연금의 이자수입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체 연구비로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정한 출연금 집행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섯째,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의 2005년도 예산은 총 1680억 원으로 이 중 167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다년도 지원사업으로서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가 집행실적 및 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2007년도 예산지원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할 2005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2006년도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점인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동 사업의 사업실적 평가는 각 사업단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상 사업단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역별 특성화 사업의 경우 총 107개 대학 중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대학은 79개 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사후평가시스템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지원대상 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여섯째,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총 600억 원의 예산 중 599억 7700만 원을 집행하

고, 2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5년도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대학들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6억 3400만 원 중 5억 9400만 원을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비의 과실금인 이자수입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출연금 이자의 부적정한 집행사례와 함께 국고금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일곱째, 외국인교수 초빙사업의 경우 2005년도 총 16억 원의 예산 중 31.2%인 5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동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 대비 초빙실적이 최소 28%에서 최대 5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아가며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입니다.

2005년도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 예산은 총 2591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257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9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보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사업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학교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는바, 2005년도에는 총 45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2005년도가 2차연도 사업으로서 총 220억 원의 예산을 8개 권역별로 13개 중심대학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은 산학협력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양 사업이 충분한 연계·조정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들의 내용 및 추진방법을 상호 통합·조정하는 동시에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2005년도 총 130억

원의 예산을 4년제 대학 18개 교, 전문대학 20개 교, 실업고 7개 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연도에 지원받은 학교 중 5개 교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향후 이행할 가능성도 없다고 학교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해당 학교로부터 1차연도 지원사업비를 전혀 환수조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 간의 협약서에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조건 충족 정도를 고려하여 회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들 학교에 대하여 1차연도 지원예산은 회수하지 않고 2차연도 지원만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은 향후 다른 대규모·다년도 대학지원사업들에서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포기한 학교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당초 협약된 바와 같이 회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사업은 총예산 17억 1000만 원 중 감사관실의 사무실 임차료로 1억 7400만 원을 이용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부처합동준비반 운영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3억 33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총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실적은 2005년도 예산상 계획 대비 3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대통령자문기구라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4회 실시가 계획되었던 대통령 보고는 단 1회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사업실적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향후 동 사업은 그간의 집행실적을 토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원년 캠페인사업'과 '민족학급설치 일본교장 초청 프로그램사업'을 예비비 사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산하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이나 광복 60주년 기념사업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비비 지출에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5개 부동산의 수익성이 그동안 악화되어 기금의 잠식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 및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개선이나 자산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적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당초 회관사업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수익창출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적자 발생에 대해서도 경영성과를 개선할 관리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주요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저수익 보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승인결정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6년 4월 19일에 대구부지를 350억 원에 매각하고 5월 9일에 광주부지를 취득원가보다 훨씬 낮은 53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연금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대전오류회관, 호남회관, 오색호텔은 매각이 2회 연속 유찰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매각승인조건에 의거, 부동산별로 매각예정금액을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가격을 조정하여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원가보다 훨씬 낮은 저가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경영인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중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의 2005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2196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 1200억 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 93개 교에 1546억 원을 용자배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동 기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인 용자포기액 과다와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동 기금의 용자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총 용자지급 예정액 1578억 원 중 85.2%인 1344억 원만이 각 사립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당초 용자배정된 학교들 중 일부가 당해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사유로 인하여 용자금을 포기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바, 2005년도 용자포기액은 총 178억 4900만 원으로 총 용자배정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32%와 비교하여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용자 포기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 기금은 사학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이라는 점에서 배정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다른 학교의 용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2005년 8월 저소득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 진학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하에서는 동 기금을 통한 2005년도 학자금 대출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운용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2005년도 8월에 출범하여 당해연도 2학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을 실시하였는데, 신용보증공급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의 보증공급 예산액 6000억 원의 78.4%인 4701억 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실시하였고, 이차차액보전의 경우 당초 계획 660억 원의 83.1%인 54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5년도 2학기에 처음 실시된 신용보증공급을 2005년도 1학기 이전의 이차보전방식과

비교하면 2005년도 2학기 중 총 18만 2000명에게 4701억 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실적이 2004년도 2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이 중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69%인 12만 6000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서 이는 언제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지 모르는 우발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의 유지가 기금 건전성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은 기본재산의 배수로 표시되는 운용배수로 나타나는바, 운용배수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변제능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금의 건전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기금의 법정 운용배수 상한은 20배이고, 2005년도 말 현재 실제 운용배수는 10.6배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부터 추정 운용배수가 15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획예산처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동 기금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는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현재 2005년도에 대출된 학자금에 대하여 총 3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억 1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이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고율은 보증잔액이 증가할수록 향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율의 증가는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운용배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자금시장에서 일반적인 적정 운용배수로 인식되는 12배 수준으로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출연금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보증공급 규모를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시에 학자금대출채권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權哲賢** 방대한 자료를 잘 검토보고해 준 구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와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지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도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방대한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대체토론 갖고는 부족합니다. 실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 내에서 집중적이고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소위원회 구성을 3 대 3이나, 3 대 2 대 1이나…… 이것으로 두 달 넘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라고는 하지만 정기국회에 버금가는 결산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지금 법안심사소위 구성 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사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되지가 않고 해서 우선은 결산 심사를 지난번 학교급식 관련 법 통과시켰던 것처럼 오늘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체토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양당 간사와 또 전문위원,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참여해서 내일 하루종일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

러나 아직 소위 구성이 되지 않고 지난 전반기에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6개월을 특별한 형태로 운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하셔서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서 빨리 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말씀하십시오.

○**주호영 위원** 결산이라 함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적절하게 집행된지를 확인해서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면 다음 연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대저 예산 중에는 계속사업도 많고 이런데 2004회계연도 결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2005회계연도에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교육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 중에서 2005회계연도 결산과 관계있는 지적이나 감사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오늘 보고내용에 포함되어야만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순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보고만으로는 충분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에서 준비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보고를 받고 결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기일에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고받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서 불필요하다든지 걱정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된 예산은 계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전년도 결산 심사할 때 지적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같은 것을 아마 교육부에서 보고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질의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나중에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방대한 자료를 벌써 두 달 전에 다 보내 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초안도 오래전에 보고드렸고, 상세한 검토보고서는 4, 5일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이군현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혁신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혁신위 운영사업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실제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과연 교육혁신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또 그 운영에 2005년도에 1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군현 위원** 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 보면 외부에 3개월짜리 용역을 잔뜩 주고 있거든요. 과연 교육혁신위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지 저는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회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책임을 맡은 사람부터 그 위원들이 정말로 한국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위원회로 구성되

니까 가끔 회의 소집하면 가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7억 예산 편성된 것도 다 쓰지 못하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자꾸 넘어온다는 것이 위원회 자체가 활동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2005년도 교육혁신위 회의 운영실적을 살펴 보면 2005년도 예산상 계획 대비 31% 집행이 됐다고요. 특히 본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적 성격을 갖는 운영위원회하고 또 전문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본회의의 안전 심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혁신위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4회 실사가 계획되었던 대통령 보고를 실제로는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통령 보고실적이 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불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이대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재검토를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2005년도에 교육혁신위가 집행한 연구용역과제를 보면 7개 과제 중에서 6개가 3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입니다. 어떤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 줘서 정말로 난마처럼 얽힌 한국의 교육문제를 3개월 동안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라, 그리고 그 보고서 받고 거의 그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교육혁신위라면 저는 이런 교육혁신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위의 목표, 그리고 연간 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 대비 실적을 철저히 교육부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이대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서 정말로 교육부는 일선 행정을 직접 집행을 하는데 일선 행정에 쫓기지 않고 좀 장기적인, 앞서서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한국 교육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플래닝(planning)을……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역량이 없으면 이 자체를 없애든지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한번 교육위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 대학에 499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대략?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인데 집행 내용을 보면 부산대학 경우에도 7억

원 정도를 야외벤치 정비하는 등 노후 교육시설 개선하는 데 쓰고, 또 6000만 원을 교직원 해외 연수하는 데 집행했다고 그래요.

이화여대도 보면 1300만 원을 로스쿨 교수법 세미나 관련 경비로 했고, 한양대도 보면 국제학술논문 공모 연구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집행했고, 5억 1000만 원은 대학원 장학금으로 썼어요. 또 충남대학교도 보면 5000만 원을 교직원 해외 연수에 사용했고, 또 5000만 원은 컴퓨터(PC) 교체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원래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인데 교직원들 해외 내보내는 것하고 대학 구조개혁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 비율이 OECD 전체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GDP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군현 위원** OECD 국가에 비해서 전체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고등교육 예산편성 비율이 하위권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돈도 작운데다 이 돈을 제대로 써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목이 잡힌 대학 구조 지원사업에 쓰라고 하는데 구조 지원사업에 안 쓰고 해외 연수 보내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이자수입 6억 3400만 원 난 것을 가지고, 이자가 나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국고에 집어넣었다가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자 난 것을 왜 바로…… 이자수입을 직접 지출을 했는데 당해연도 사업비에 이자수입을 바로 포함해서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래서 올해부터 시정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할 것이 꽤 있는데 다 못 하면 남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어요.

고구려연구재단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홍보·학술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사업의 항목 중에 시민홍보사업 지원사업으로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고구려연구재단과 관련되어서 시민단체들에 지원한 돈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과연 이것을 합당하게 이런 단체에 계속 줘야 하는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시민단체의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 통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시민단체가 NGO니까—비정부단체니까—정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굉장히 전시적이고, 정말로 동북공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고보다 그저 단체에 지원해 주는 성격의 것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교육부에서 좀 정밀하게 그 결과보고를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 대략 4700억 들이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게 우선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자금 교부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특별교부금 국가정책사업 심의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질 뿐 이 예산의 용도, 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국회에 제대로 잘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이 교육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초·중등 분야의 주요사업하고 그

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특교를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거나 또 특교가 들어가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줄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부문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측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신 분 있습니까? 차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 부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런데 교육혁신위원회 관련 예산은 교육부의 평생·직업·국제 교육 부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기획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아니, 평생교육·직업교육·국제교육 부문에 교육혁신위원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저희 교육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렇다면 결산심사할 때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육혁신위원회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은 누가 합니까? 여기에 질의해서는 안 됩니까?

앞으로는 아마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다행히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혁신위원회의 보고도 좀 받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교육혁신위원회 설동근 위원장과 합의를 봐서 내일모레인 24일 11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4일 11시 30분에 3층에 있는 귀빈식당에 다 나와 주셔서 교육혁신위원회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는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열여덟 명의 교육위원 중에서 그날 아홉 분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데, 우리가 요청하는 건데 좀 시간을 조정해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이은영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EBS의 인터넷강의인데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EBS 인터넷강의 교재에 대한 수입은 상당한데 교재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게 하고 있어서 인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EBS 인터넷강의가 2006년으로 완료되는데 놓여 촌이라든가 또는 도시·벽지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또 나아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좀더 방송강의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지난주에는 학원에서의 과도한 수강료 징수 보도가 있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수능시험(SAT)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강료가 45만 원이라고 게시되었는데 실제로는 600만 원 정도를 받았단가 또는 강남의 보습학원에서는 기준액이 100만 원인데 초과한 156만 원을 받았단가 이런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금 실태를 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과 직장인도 토익·토플이니 해 가지고 외국어 교습학원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주머니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대학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꽤 늘어서 외국에서 주관하는 학력테스트에 들이는 국민들의 응시료 및 그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교육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가 또는 부당한 가격을 받는 그런 학원 등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듣겠습니다마는 아울러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에 어린이 외국 영어연수를 가는데 부모와 동행해야 되는, 부모와 동숙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어기고 인솔교사가 그 나라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어린이들을 많이 인솔을 하고 있는 예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외 영어

연수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파악 및 단속도 필요하고요.

지금 유학 알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설 유학원에 맡겨져 있고 교육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감독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뿐 아니라 해외유학이라든가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나 상담센터가 없습니다. 그러한 전문 상담교사라든가 또는 전문 상담센터의 개설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는데, 일단 제가 질의드린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EBS 인터넷 수능 강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강 효과가 상당히 있고, 공교육만 가지고는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기가 아직은 힘들기 때문에 EBS 수능강의는 계속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재 판매수익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이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EBS와 같이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수준에 있고요.

다음에 학원수강료 문제는 오늘 보도자료에 나간 것처럼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중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서 어느 때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 유학원 관계는 저희가 종전에도 등록제라든가 이렇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서비스업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검토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소년들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유학 나가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학가이드' 책자도 만들고 국제교육진흥원에 유학상담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마는 민간부문을 저희 공공부문이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폭넓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시기 바라구요.

다음으로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집행 및 연

구평가사업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BK사업이 본 교육위원회에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BK사업의 연구도 내실이 갖추어지지 못한, 형식만 갖춘 연구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사업비를 지출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중간평가 및 최종점검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부 산하기관들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연구평가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평가가 형식적으로 되고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가장 심한 예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스타 팩컬티(Star Faculty)사업'의 경우에 예산액이 48억 원인데 그중에 전용된 것이 26억 원으로 약 55%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응분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런 예가 거듭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평가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육위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독어독문학회 불어불문학회 영어영문학회가 '대교협의 평가를 거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교협은 지금 대학에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현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학교에 그냥 시찰 오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학교의 운영 상태를 평소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피감기관에 폐를 주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대교협의 평가는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평가 방법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행하는 평가들이 많습시다. 앞으로도 많이 진행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로 교육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교원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평가 또 학교평가 등등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의 주요 부분이 대상기관 또는 학생·교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피평가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자기 발전을 모색하

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평가 방법에 대한 개발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교협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사실 저희가 BK1단계 사업에서 평가를 양적 위주로 평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논문 중복이라든가 질적 심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적 평가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 감사, 그리고 과학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다시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의 평가는 저희가 상시평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2단계 평가모델을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질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상시적인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타 패컬티는 사실 너무 준비가 덜된 채로 과욕을 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 불용액이 많이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액 집행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대교협이 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대교협이 기구 성격으로서 평가기관이나라는 부분에서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교육평가원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평가기구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기관평가, 학문분야 평가를 총괄 조정하고, 지금 분야별로는—공학이라든가 경영 의학 간호학은—민간의 평가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기구를 활성화시키면서 총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고등교육평가원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교원이라든가 학생·학교 평가도, 학교평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고 학생들도 샘플 형식으로 지금 전국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교원평가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부

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이은영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저는 누리(NURI)사업과 BK21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BK21사업에서 연구성과가 미비하다, 또 연구비 유용 문제, 논문 수의 허구, 그다음에 사업집행의 부당성이 적발되어서 수많은 혈세를 낭비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5일의 2004년 누리사업에 대한 1차 연차평가에서 보면 총 1차 112개 사업단 중에서 7개 사업단이 선정에서 취소되고, 또 61개 사업단 사업비 삭감 결과가 나왔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2005년 7월 18일 2차년도 지원을 위한 요건심사를 실시한 후 7월 말경 연차평가 발표 전에 지원예산의 10%인 189억 원을 각 사업단에 우선 교부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10% 예산 배정을 한 것은 사업단 선정 취소와 사업단 사업비 삭감 결과 평가와 관계없이 집행해도 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고 사업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이 평가가 나온 게 바로 8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7월 30일 전에 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예측은 할 수 있었지 않아요? 저는 예견하면서 돈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갔다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취소된 7개 사업단으로부

터 지원예산 중 72억 원을 환수받아야 되겠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 그리고 또 학기 단위로 지원이 되고 주로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환수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누리사업에서 장학금으로 나갔다고요? BK21 말고 누리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누리사업도 학생들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학기 단위로……

○**김영숙 위원**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누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학생의 어떤 돈으로 나갑니까? 장학금은 BK21사업이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누리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인력양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뜻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돈이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못 한다…… 물론 학생 대상으로 돈이 나갔지만 그건 그 학교에서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사실 다음 학기 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걸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못 나간 건 환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10% 선교부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반납된 3억 7800만 원 이것도 환수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장학금이라든가 계약직교수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저는 그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집행된 것을 알면서도 그게 이미 나가서 집행됐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되나요? 뭐 먹고 난 다음에 ‘배 짜라’ 하는 격으로, 이 표현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교

육세가 결손이 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세 결손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바로 지방교육재정의 황폐화가 초래되겠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내국세가 19.4%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교육세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세는 그중에 주세, 특별소비세 이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경기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많이 받는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계획에 못 미칠 경우 세수 결손이 되리라는 것을 예견을 못 했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국세 규모가 적고요, 특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세 부분은 경기도에 민감한 세목이 많아 가지고 더 결손이 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소 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에 이르는 교육세 결손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1년도 아니고 이게 5년간에 걸쳐 가지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숙 위원** 그게 한 2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저희가 교육세 부분만을 별도로 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 부분을 정부에서 추계를 잡으면 거기에 부가세 형식으로 교육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부가 별도로 교육세 부분의 추계를 잡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민감하지 않은 세목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김영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5년간 계속 이렇게 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의 결손이 반복되니까 그대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정적인 세목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등록세 이런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재산세·등록세도 요즘에 내려 주고 보니까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그야말로 손가락 빨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정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저희가 안정적인 세목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주민세나 재산세에 더 부가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교육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회 열리기 전에 농촌에 봉사활동, 수해지역 이런 데를 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주민 전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한나라당 쪽에서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지방의 학생들이 문제고 학교가 6개가 같이 한꺼번에 통폐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웃에 통폐합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보면 통폐합을 하면 예산을 더 줄 것이고 그래서 학교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식학급—한 교실에서 1·2학년 가르친다든가—이런 것도 과감하게 하고 시설도…… 또 방과 후 교육도 할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도시 교육에서처럼 충원받지 못한 것을 거기에서 받는 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작년 경우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100억 원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 가서 보니까 청년회를 조직했는데 청년회라고 해서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60대예요. 거기에서는 청년 이래요. 보니까 젊은 분들은 교육 여건이 나으면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농어촌 교육에 예산도 확충해서 많이 붓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인천 서구의 김교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술연구조성사업, 교육방송 인터넷강의 사업,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 누리사업 평가·관리운영비 등 이렇게 잘못된 전용 사례 이런 것은 어떻게……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여하간 이것이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하고 이원화시켜서 전용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출연금으로 바뀌어서 그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하여간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의 산하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예·결산을 심의해 봐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시스템화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교홍 위원** 그다음에 전문대학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근로경험 축적 목적이 우선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개 교내에서 이 학생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96% 정도. 그다음에 교외가 한 4%인데, 그중에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한 3% 정도…… 이런 것은 근본적인 목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생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순수한 장학금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장학금을 주면서 가능하면 전공과 인접한 근로경험 축적이라는 면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의 87%가 주간 학생들입니다. 주간 학생들이 산업체를 찾아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만 밖에 나가서 근로경험을 쌓고……

○김교흥 위원 차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아예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기업체에서 근로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워크 스터디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현장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제도인데 이것은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근로를 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받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산·학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와 연계해서 오히려 워크 스터디는 그런 쪽으로 맞추고 순수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지급대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예전의 근로장학생하고 별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맞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학생은 전혀 대상이 안 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올해부터 20억 원을 늘려서 수도권에 1000명을 배정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1000명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이게 올해 100억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80억에서 100억으로……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 늘린 게 수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저는 수도권도 이 부분은 좀더 포괄적으로 더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건 비수도권이건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것이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굳이 한쪽에 편중되게 할 정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나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2010년까지 3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900명까지 증가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교흥 위원 그래도 저는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상당히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이 상위 1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인천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중학교에 가 보면 격주로 원어민 교사가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7%가 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것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흡족할 정도의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도 막대한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중학교에 1인씩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교흥 위원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1인씩 배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래서 지금 우선은 채용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원어민도 역시 시골을 안 가려고 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교원대학교에서 원어민 교원 초청 및 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교체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게 교육부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잖아요. 대개 1등급은 수도권에 편제되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지방은 1등급은 거의 안 가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에 대한 인성 관리, 요새 성 폭행 문제라든가 절도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한 것은 단순히 교사자격증 소지자냐, 석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등급만 매겨 놨지 실질적으로 이들의 인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시·도교육청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이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교흥 위원 이것 꼭 좀 점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원어민 교사를 뽑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성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히 자격증만 보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대나 국립대 사범대나 일반 사립대 사범대의 영어교육과에 전임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원어민이 몇 %나 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교홍 위원** 차관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것대로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우리 영어교사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게 난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 영어연수에 63억 원 정도만 쓰여집니다, 9.26%.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영어교사를 하는 사람이 원어민으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는가…… 원어민만 써서 시간강사나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무한정 붓기가 될 거란 말이지요. 예산은 막대하게 들면서……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영어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가 토플 성적이 높은데 거기는 원어민 교사를 전혀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국감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교수 초빙 문제하고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사업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교수 초빙문제는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국립대학은 잘 안 가려고 하고 또 이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학교에 50% 매칭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학교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교홍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의 의지 미흡도 있지만, 그것도 큰 요소로 작용하지만, 여기에 오

는 교수님들의 아이들의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주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초빙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능력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주거는 59%, 의료 33%, 자녀 교육 84.2%,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요소들이 연구능력 개선에 제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때 50 대 50의 매칭펀드만 하지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가 이들의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형식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과학기술자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진도율이 100%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원을 좀더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잘 비교를 하셔서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 저는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외국인 교수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치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비교해서 지원할 것은 제대로 지원해야지 단순히 매칭펀드로 교육부 50 해당 학교 50, 해당 학교의 미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해당 학교가 50%를 내는 것에 대한 의지의 부족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다른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를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김교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교수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외국인 교수 유치 문제는 저희가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도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잘 되는 이유하고 비교할 때 외국인 교수 유치는 매칭펀드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분야는 50%에서 30%로 낮춰 주고요, 그다음에 재응모할 수 있는 기회도 2회에서 3회로 높여 주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기할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 문제는 저희도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직교사 양성·선발 이 부분, 또 재연수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뉴스위크 100대 대학 선정에서 우리가 하나도 포함 안 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마 지금 김교홍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교육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미리 충분히 계획이 되고 그 계획된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고 또 결산에서 검증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중간에 끼어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BK21·누리사업관리위원회 출범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 시 보고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교육부가 아닌 학진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여러 대학경쟁력사업 중에 BK21과 누리만을 떼어 가지고 두는지 이런 게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누리사업이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이라면 당연히 수도권외의 특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이 같이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BK21과 누리사업을 묶어 가지고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계획되지 않고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될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 결산에 관련되어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학자금대출제도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TV·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송출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주호 위원** 그런데 그 광고 송출이 5억 2000만 원이 넘고 또 제작 건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데, 이 2건 다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달청에 의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 위반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법령 위반은 아니

고요. 원칙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맞지만 이 법률이 2005년 7월 1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긴급한 경우에는, 경쟁 불일 여유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 당시 법령은 아니더라도 원칙을 위반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계획되고 예산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능하면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지원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2005년도에 3억이 배정되었는데 이때 계획된 국립대학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은 아예 실시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신에 갑자기 다른 것을 끼워 넣다 보니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

○**이주호 위원** 답변은 당장 못 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충분히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것인데 유아교육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만 5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무상지원 유아 수를 보면 오히려 보육시설이 10만 명이 넘고 유치원은 8만 6000명이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유치원에 대한 접근도가 저소득층 지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일반적으로 보육원은 저녁 늦게까지 맡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이 더 선호가 있고요. 또 사실 가격도 보육원의 보육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특히 보육원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저소득층이 선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소득층이 결국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답변 중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유치원 교육의 경우, 사실 77%를 담당하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보육기관에 비해서 실제로 수업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종일반 비용이라든지 급식비 비용이 별도로 부담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불가피하게 유치원을 못 가고 유아원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유아교육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사실 유치원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주호 위원** 그다음에 이공계 장학금 지원사업인데요. 2005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성적이 우수해서 1차에 선발된 인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1만 2056명이었는데 2005년에 5670명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있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수인력을 이공계에 장학금으로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학생이 준 것은 저희가 기준을 내신 30%에서 20%로 강화해서 줄었습니다.

○**이주호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수인력 선발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했는데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이 유인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못 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학금 수혜학생의 중도탈락률도 2004년에 16.6%였는데 2005년에 21.2%로 해마다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성적미달도 있고요, 가장 큰 비율은 휴학에서 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를 떠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지표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전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2, 3년 전에 정부가 '이공계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공표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업부서도 사실…… 저는 부처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학생들의 선발에 관련되었고 유인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야 되는데 과기부로 이관된 것도 이상하고요. 상당히 기계적으로 부처 업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부처 업무 조정을 하면서 과기부가 이공계 인력 양성을 좀더 주도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을 하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자금 대출사업을 맡고, 대통령 과학장학생, 해외 석·박사학위 취득 장학생, 이런 우수 과학이공계 학부생 장학금사업은 과기부로 했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어떻게 이관됐느냐를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부처 간에 협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부처 간의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고 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이주호 위원** 만약에 과기부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실 부처 간에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업무 협조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신입 부총리가 부임을 하면 과기부총리와 저희 부총리께서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서 MOU를 맺기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

○**이주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공계가 정말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장학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대학이나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 중에 보면 해외 유학박람회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 애당초에 16개국에서 유학박람회를 하기로 해 놓은 현재 8개국으로 축소됐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기존에 유학생을 유치한 국가뿐만 아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해서 알린다는 차원이라면 가급적 계획된 국가를 유지해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축소됐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한국대학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가는데 참여대학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이주호 위원** 사실 그렇다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중간에 계획한 대로 열심히 못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런 부분, 특히 앞으로 이것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로 해서……

○**이주호 위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더 서면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성 위원** EBS교재 판매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또 퇴직금누진제 폐지 보상금으로 각각 43억, 52억 지출했는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보조금 준 것은 교재개발로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 지적도 받았던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EBS교재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련을 해야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최재성 위원** 마련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보니까 초기연도에는 홍보나 이런 것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한 것에 비추어 보면 상당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적정 운용배수가 지금 12배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한 10배 정도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많아서 늘어날 경우에 그때는 이것을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지켜야 부실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지켜야 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적정 운용배수를?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9배 정도까지도…… 그런데 당장 내년 예산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적정 운용배수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고 만약에 수요는 폭증하고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예컨대 이번에 보니까 기 보증한 전체에 저소득층이 69%더라고요.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은 저소득층이 기존 학자금 대출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증을 인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요 타깃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선진국형으로 간다, 이런 두 가지인데 적정 운용배수가 초과될 위험이 있을 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야 되고 보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보증이 가능한 학생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유학생 유치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국제정보화국에서 합니다.

○**최재성 위원** 외국교수 초빙사업?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대학정책과에서

합니다.

○**최재성 위원** 이 두 개 다 보니까 국고하고 대학하고 공동 대응을 하거나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은, 외국유학생 유치사업도 대학의 참여가 미진하다고 조금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것 통제수단이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사실 외국인 교수 유치사업은 대학에서부터 요청이 있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매칭펀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런 방식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교수를 초빙하는 것을 100% 국가 돈하고 대학 돈을 매칭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외국에 그런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교환가치 중심으로 각 대학을 설득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컨대 A라는 대학이 협정을 맺은 외국에 같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면 교류 폭이 더욱 확대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학에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대학에 실질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외국에서 똑같은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대충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약을 해내고 그런 디자인을 교육부에서 해서 제시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홍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뭐냐 하면 북경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우리 서울대학에 와서 그 졸업장 따고 중국에 가서 먹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스탠포드나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간 것은 그 졸업장을 따고 국내에 왔을 때 취직도 잘 되고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그 졸업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공부하고 학위 따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열 100등 바깥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 국내대학을 보고 특히 자비로 유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중장기적인 과제를 실현해야 되는 책무가 있고, 하나는 외국유학생을 일정 포션 받는 조건하에서 기업들의 대학 참여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컨대 우리 삼성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기업이 IT대학을 한다, 다만 이것은 국내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 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다, 그러면 마닐라 대학을 지망하고자 했던 학생이나 북경대학을 지망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IT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돈 내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이 갖고 있는 장애를 제한적으로 제거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외국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비가 높으나, 낮으나의 문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여기 보면 국제 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제교육진흥사업이 있는데 국비유학생이 19억, 정부초청학생 교류 지원이 26억, 개도국 청소년 초청교육이 9600만 원, 글로벌 차세대지도자 초청연수가 4억 3000만 원, 우리가 세계 10대 교육국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또 실제로 낮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가장 높이고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국제화시대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차세대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발굴하는 사업에 조금 더 진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한 학자들이 비판도 있지만 아직도 미국 중심의 사고라든가 자기 학문적 방향, 정책방향 이런 것으로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체계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특히 누리, BK,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사업, 대학 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물론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대학에서 비협조적이고 도를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또 공동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번 우리가 국감 할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마련하십시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개별사업에 대해 매번 똑같이 나오는 얘기를 지적하고 또 지적받고 이런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누리 요건심사하고 연차심사 전에 선 지급금 10% 하고,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서도 다년도 사업은 교부일시하고 평가일시하고 오히려 거꾸로 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익년도에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기를 잘 조절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를 연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급시기하고 평가시기하고 거꾸로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조성하시기 바라구요.

학술연구 조성사업이나 몇 가지 문제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저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현안 문제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한 체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교육부 공무원이 학생체벌 법적 금지지를 포함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계서는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때 담당 과장이 기자 질문에 “올 하반기 중에 체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우선시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었는데 기자 질문이 “그러면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연구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기본……

○최순영 위원 교육부 입장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최순영 위원 공식적인……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은 학교 정문에서 멈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운영방식 문제점은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일부 개선이 됐었습니다. 교부금 중에 11분의 1을 교부하던 것을 4%, 100분의 4로 대폭 감축시켰고요. 그리고 개선된 방안으로 2005년, 2006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 또 시의적절한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집행기관에 재량을 어느 정도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런 폐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05년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현안 사업에 12월 28일 전체 현안 사업의 지원액이 30%에 해당하는 709억이 교부되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시책사업 교부금도 11월, 12월 2개월간에 45%가 교부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최순영 위원 이처럼 연말에 예산 집행이 되면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사실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료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특별교부금이 집행되었고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영향력이 강한 인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강당, 수영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육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주호 의원께서도 삭감을 50%인가 몇 퍼센트를 하자라고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사업 외에 국가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교부금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05년도 2006년도 대폭 감축한 것을 가지고 2년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교육 현안사업, 말 그대로 현안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교육시설이 부족한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4% 중에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낭비하는 사업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국가시책의 현안사업이라면 그냥 일반예산에다 하면 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로비에 의해서 쓰였다고 지적도 많이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현안사업 예산이 더 줄어들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방송 수능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방송 수능 방송이 사실 사교육비 경감의 단기 대책인지, 장기 대책인지 묻고 싶고요.

2004년도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단기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BS 수능강의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EBS 수능강의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EBS 수능강의와 수능 문제를 역지로 연계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고교 교육의 다원성을 해치고 오히려 공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EBS 수능강의를 TV를 통해서 다 하고 공교육이 그것을 보완해 주는…… 사실 공교육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교육비 경감으로 EBS 수능강의를 하게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EBS 수능강의는 본질적으로는 고가 사교육에 대한 대체재이며, 침체에 빠진 공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지금 현실에서는 사교육비 경감과는 무관하게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BS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 강의 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직원성과금, 퇴직금 등으로 잘못 쓰였다는 등 교

재판매수익금을 부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EBS는 학생과 학부모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 잇속을 챙겨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 EBS 수능강의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EBS의 잘못을 오히려 조장해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5년도 국감과 예산심사를 통해서 EBS 수능강의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EBS에서는 이익금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고 그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13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EBS는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이익금을 직원 인건비로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또 교재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그 답변은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EBS에 국고보조금 137억 원을 교부할 때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교재판매대금 잔여 수익금을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재 및 PC 무상지원 등으로 쓰도록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 수능 교재판매 수익금 중 교재판매대금의 잔여 수익금에 대하여 교부 조건에 맞게 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데 사용토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EBS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EBS 수능강의는 2004년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나 사교육비 절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교육비가 EBS 수능강의 교재구입비로 전환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EBS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과외 등 사교육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학생은 46.3%고 학부모는 58.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1.5%, 학부모는 36.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EBS의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고3 학생의 17.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24%에 그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고3 학생의 51%나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39.7%입니다.

따라서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전국의 학교를 획일화시키는 폐해가 더 크므로 EBS 수능강의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거나 새롭게 평가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BS 수능 과외가, 저희도 발표할 때부터 이것을 해열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보완적으로 EBS 수능강의를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특히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학교 선생님이 50% 이상 출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기본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EBS 강의가 활용되리라고 보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교재 이익금 관계는 EBS가 공공기관의 성격도 있지만 또한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탁 전에도 한 100억 원 정도를 이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능하고 연결되면서 이익금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 교재가격을 15% 인하합니다. 그리고 교재 무상 공급도 작년에 3만 명을 했던 것을 올해 4만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만 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수능 관련 교육 인프라에 올해부터 2008년까지 한 444억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교재 제작 단가는 해마다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해마다 줄여 오고 있습니다. 첫 해에 200억을 했고, 작년에는 137억, 올해는 지금 121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BS 자체 투자가 올해 80억이 예정되어 있고, 작년 55억에서 2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더 지도·감독해야 할 부분은 사실 지금 EBS가 방송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

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권이든가 관리감독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걱정하신 데 대해서 좀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주호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200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책자로 되어서 작년 12월 12일자로 발간되었는데 이게 의원실에 지금 다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 결과도 2006년 6월 1일자로 발간이 되어서 의원실에 배포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춘 위원**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춘 위원** 2003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간 평가가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일단 하드웨어 쪽으로는 전체 학교도서관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독서교육까지 활성화되어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 대입 이후에 독서기록이 기록되고 그것이 대학입시에 반영이 된다면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은 이 예산들은 대부분 도서관 공간을 만들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지 장서 구입이나 사서 교사를 채용하는 예산으로는 사용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껌테기는 만들어 놓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공급해 주고, 또 좋은 독서 습관을 지도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은 학교에만 일임된 상태에서 학교는 그런 예산을 지출할 여력은 전혀 없어요.

이게 우선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도서관사업이 정작 필요한 데는 대부분 농어촌지역, 낙후지역의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작은 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지역들의, 또 정작 도서관은 낙후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들 경우에 해당 지자체가 매칭 예산을 50% 부담하기가 힘든 지역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도서관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매칭사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업에도 보면 지자체들이 법정분담금비율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은 아예 어떤 분담을 해야 할 사업인데도 사실은 분담 의무가 없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거나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할 사업인가, 또 어떤 사업은 매칭펀드로 진행해야 할 사업인가, 또 어떤 사업은 지방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사업인가, 이런 기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은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업 실적은 저평가되는 문제점을 피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할 부분과 지방사업으로 할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김교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대학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말이지요.

전문대학 재학생 수가 총 17만 명을 조금 상회

합니다.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대학 재학생들보다 생활형편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평균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들이 전체 재학생의 한 55%가 돼요. 한 9만 50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신청자 수는 5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4380명, 신청자의 77%가 혜택을 받아요.

이것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것이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산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장학금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러리라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규모가 저 정도라는 것이 애기가 안 되는 게 신청자 숫자가 적다 말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아무래도 될 확률이 낮으니까 적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의 77%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것인지, 막상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근로장학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가……

혹은,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생들이 현장실습 학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근로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내 근로란 말이지요. 이런 데에서 오는 미스 매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저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따져 보고, 실제로 전문대학교들에서는 이 사업 예산을 늘려 주기를 학생수고대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가 75%, 학교가 25%를 부담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전문대학교협의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대상 중소기업체 중에 한 40%가 ‘학생들이 자기 회사에 취직을 하면 시급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런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장학금의 성격, 그리고 전문대학의 성격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아까 김교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확대시키는 쪽으로 제도적인 수정을, 미조정을 해도 대상 학생 숫자를 많이 늘리면서 예를 들면 학교가 25%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부담하게 하고 기업체가 25%, 정부는 50% 정도만 부담한다고 하면 25%는 정부예산에서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다른 근로장학생들에게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다든지, 이것은 아주 어설픈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수혜 대상 학생 숫자를 늘려 볼 수 있는, 그리고 산학협력, 학생의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산 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2005년도 교원성과급 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한 4900억 원인가 된다면서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올해는 총액이 1인당 평균 130~1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춘 위원** 연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춘 위원** 저희 방에서 보좌진들이 일요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따로 통계를 내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산 자체는 따로 뽑을 것도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나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실속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간단히 따져 보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초빙 계획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한 16억 된단 말이지요. 이것 필요경비를 빼고 나니까 실제 국비 50% 지원한 것의 평균액수가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학교가 50%를 내도 30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3000만 원 정도로 우수 외

국인 교수를 초빙한다고 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일단 단순산술평균만 따져 보면 그렇겠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렇지요.

○**김영춘 위원** 그래서 학교들은 불용이 많지요? 작년의 경우도 총 예산액 중에서 67%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3%는 불용이 되었어요.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가 돈을 많이 내서 한 1억씩 이렇게 어떤 페이를 주어서 좋은 교원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학교발전기금이 많은 학교는 가능합니다, 학교발전기금에서만 그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처럼 국립대학교지만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 있는 학교는 이 사업을 명실공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에 부합하게. 빈익빈 부익부만 자꾸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발의하고 요청한 데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조차도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원단가가 연간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 학교 재정 부담도 크고요, 그 다음에 학과 안에서……

○**김영춘 위원** 초빙 교원 1인당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리고 지방대학 같은 데는 물론 그 여건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 지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김영춘 위원** 그러면 100명에 16억 예산은 안 맞는 것이지요? 목표 인원과 예산액 따져 보면 안 맞는 것이지요?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종합평가를 다시 해 보았으면 좋겠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그것 해소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경기 부천 원미갑의 임해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BK사업 관련해서 물겠습니다.

우선 BK 1단계 사업에서 7년간 총 1조 3400억 원이 든 사업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제가 우선 한 가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목표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BK사업 중에 지역대학 육성 분야가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임해규 위원** 1년에 500억씩 7년 동안 35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신청서에 보면 사업팀이 첫째는 외국어능력 향상, 두 번째는 전공분야 산업체 취업, 세 번째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팀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급받고 사업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 구사능력 분야에서 대체로 사업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지어 어떤 학교는 원래 자신이 제출했던 사업 목표의 1.6% 정도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평균을 보면 한 21% 정도가 된 다든지…… 이것은 특정한 외국어 시험에 몇 점 이상을 몇 명이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양적인 지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 수도 아예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자격증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취업률도 대체로 굉장히 성과가 낮습니다. 그것은 경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가 2차 사업단 선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금방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사업단 평가결과가 2차 사업을 할 때 크게 반영되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2단계 사업 선정 기준에…… 1차 사업에 참여한 대학 사업단도 있고 또 사업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기준으로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 때 성과가 낮은 팀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에서 배제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없었던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같은 팀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임해규 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도 전혀 평가되지도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 학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도 좀 어려웠고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최종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구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중간평가를 물론 하고 매년 평가를 하는데 최종 사업 평가가 아무런 구속력이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무성을 도대체 어디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전체 33개 지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3개 지표가 대표적으로는 좀 저조한 지표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지요. 최종 사업의 실적평가 이런 것들이 학교 단위면 학교 단위고 어떤 단위로 그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이 물어져야지 책임 있게 하지, 중간평가 하고 잘 못 된다고 해도 중간에 회수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구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BK21 사업팀 소속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잘 지급되지 않았다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해 2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래서 저희가 지

원받는 대학원생들을 관리하는 훈령도 만들고 DB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 교육부라든가 대학 홈페이지에 신문고 이런 난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문제 제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학비에서 바로 공제되도록 해 주는가요? 새로 개편되는 것이 아예 학비에서 그 인건비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계좌로 직접 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전 1단계 때도 교수님이 통장 하나 개설하라 그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도 많이 읽으셨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사실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대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놔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학생들을 전부 DB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 참여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지원비가 인건비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장학금이 아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뭐, 같은…… 장학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것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데 특정한 학생들만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교수들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지도하는 많은 조교들이 함께 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몇몇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라는 형식이라고 인식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좀 나누어 줘야 한다는, 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로 분명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되

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BK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부총리 사실상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조차도 희생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 하면,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BK사업이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HRD다, 그냥 장학금을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이 공무원들이나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사업…… 그리고 그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한다는 것은 허울에 불과한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 정밀하게는 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김병준 부총리의 당시의 답도 그랬어요. 이것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이것이 'Brain Korea 21'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업의 제목을 내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학생들에게 맡겨서 논문 쓰라 해서 되는 작업도 아니고 교수님이 그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과제를 놓고 주도해야 되는데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사실상, 특히 2단계에는 오히려 거꾸로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1단계는 50%만 인건비였는데 2단계는 오히려 75%가 인건비로 나가는…… 후퇴했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진짜 학생들과 교수가 교육력을 제고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성과도 내고 그 성과를 제출토록 하고 그래야지 그 사업 성과를 수행하는 인건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수님도 물론 그 인건비를 받아야 되고요. 특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평소에 교수로서 학교로부터 받는 급여 말고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받아야 되고, 즉 사업수행비를 받아야 되

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에 가야 되면 연구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사업에서 이 연구비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유기홍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연구비는 저희가 학진을 통해서 학술연구조성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수인력 양성사업, 석·박사 과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깐요, 보충질의 때 다시 제가 제 의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차관님 혹시 ‘아나공’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못 들어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나, 공 즐겁게 너희들끼리 놀아라’.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못 들어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우리 체육수업의 현실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 우리의 학교체육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공’ 수업이 지금 우리 학교체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하반기 상임위가 열리면서 김영춘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교체육 혁신방안이 수립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올 5월 말씀입니까?

○**안민석 위원** 작년 5월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안민석 위원**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문제, 그다음에 비만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만한 동력이 저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부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3월에 교육부에 학교체육보전급식과를 신설했고 그 이후에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낼 만한 동력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 내의 학교체육 전문인력 1명이 전국 1만 개가 넘는 학교의, 체육교사만 하더라도 1만 7000명의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시스템이 바뀌고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구조가 확립되어야만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이 직원 1명이 학교체육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욕심도 사실 체육과를 독립해서 만들려고 추진하다가 그런 모양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위원** 2006년 사업예산에 체육 관련 예산 반영된 것 보니까 소년체전 5억,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57억, 학생 건강·체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이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체육 혁신방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 학생들의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요,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저는 의지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동을 우리나라 중학교 정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정책방향만 내려보내고 예산은 알아서 하라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주요 국가시책으로서 최소한의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시범사업 정도를 교육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체육 프로그램만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선택에 대해서 바우처를 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관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체력 저하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안민석 위원**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인데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체력이 이렇게 비실비실하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의 그런 답변이 결국에는 체육을 여러 교과 중의 하나로 보는 그런 인식이라고 보고요, 기존의 교육정책에 일관하게 이어 내려진 그 인식 때문에 체육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모든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체력이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도 할 정도니까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그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현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하고 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교홍 위원님이 원어민 영어교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역 편차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 원어민 교사 배치비율을 보면 37.1%로 가장 높다고 하는 곳인데 인천 출신인 김교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서는 그래도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전북과 울산의 경우에는 3.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충남은 지금 원어민 교사 1명이 학생 약 1500명을 담당하고 있고 울산은 충남의 20배인 약 3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등 편차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하고 농어촌 지역 편차를 없애는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 월 10만 원의 농·산·어촌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안민석 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들도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농어촌에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민 교사 초청 업무도 지방사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고로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감들이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원어민 교사 부분은 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교육청과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돈벌이를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도 아니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해결할 필요를 느끼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통해서 원어민 교사들에게 주는 급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은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사 학과·학부 통폐합 등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강점 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따라서 대학의 재원 집행은 대학 구조개혁사업 목적 달성 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정문헌 위원**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지원금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미리 심사를 하셨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정문헌 위원** 심사하셨을 당시에 교육부는 대

학 구조개혁 지원사업비의 집행항목이 동 목적의 달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획·집행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구조개혁 내지는 특성화로 가는 초석이 되리라는 확신하에서 이 집행계획서를 다 승인하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비 집행지침에 보면 회계를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기성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BK21사업이나 누리사업과는 좀 다른데 이와 같은 회계 귀속방법을 채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지금 BK하고 우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에 넣어서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특성화사업은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비로 바로 지출을 못 하고 기성회계로 넣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대학 구조개혁 지원금이 차관 생각에는 대학들 구조개혁에 따른 순수한 보너스 성격의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금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구조개혁을 하면서 그냥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 분야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라는……

○**정문헌 위원**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학교에서 했을 때 거기 들어간 돈을 그냥 보너스 형식으로 메워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지원금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학생 수를 줄임에 따라서 학교 재정수입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문헌 위원** 학교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그 숫자를 줄이는데 따르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문헌 위원** 그런데 지금 기 집행된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학 구조개혁 사업비 집행지침상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

쟁력 제고, 구조개혁 사업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집행된 것들이 있는데, 차관께서는 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 경비, 이것은 특정 대학들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 구조개혁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 경비, 교직원 국제화 능력 제고 명목의 국외여행비, 직원 국외 어학연수 지원비, 단과대학 강사대기실 비품구입비, 행정실 비품구입비, 구조개혁 선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구조개혁을 하면서 선진국의 우수대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데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버스 운행하는 제반 경비에 쓰고 야외벤치 정비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액 다 대학원생한테 지급하고 강사료 쓰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구조개혁사업이……

○**정문헌 위원** 디지털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것을 샀으면 ‘공과대학에서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60몇만 원짜리를 사면 이것을 세미나 할 때 찍으려고 산 것입니까, 학과에서 소품을 갈 때 찍으려고 산 것입니까? 이것이 구조개혁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집행계획서에 미리 다 올라갔는데 교육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그냥 승인을 해 버렸다는 문제거든요.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국민들 혈세인데 이런 부분이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느니만큼 조금 소홀히 다룬……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된 사항인데,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올해가 중간평가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본 위원은 사립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구조개혁 지원금이 각각 대학의 구조개혁에 따른 제반 비용의 충당과 단일대학 기반의 조성을 통한 특성화·전문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 지원금이 자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통해서 대학 구조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향후 운영방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그냥 소비성에 몇십억 주고 없지는 것보다 되레 늘 강조하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대학들을 선정해서 이 돈들을 일회성 소비용보다는 구조개혁기금의 형식으로 주고 거기에 매칭펀드를 붙여서 심사를 해서 더 잘하는 대학은 또 이것을 기금으로 늘려쓰게 하고, 이러한 방안이 훨씬 더 대학의 경쟁력 제고나 통폐합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그냥 투입되고 날아가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러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확대 중에 있는데 만 5세, 만 3·4세 및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금액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 한 940억 원으로 234%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교육부 예산 29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이 1조 원밖에 안 됩니다. 유아교육 예산이 교육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적은데 차기연도 예산이라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올해가 1996억인데 내년엔 신청은 3967억을 해 났습니다. 얼마나 더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경제적 여건으로 유아교육 받지 못하는 아이들 비율이 한 30%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정문헌 위원** 이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교육의 출발점부터 기회의 형평

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고, 특히 강남에는 지금 100만 원짜리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기회조차 없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차관계서는 오래 교육행정에 몸담으셨는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농어촌과 저소득층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5세아는 전원 무상교육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정문헌 위원** 예?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5세아 유아교육은 전체 무상교육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3·4세는 저희가 소득계층별로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의 유아들부터 지원하는 것을 넓히고……

○**정문헌 위원** 무상교육이 시도가 되더라도 그것이 그냥 유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되레 학부모들한테 바우처를 주어서 유아원을 선택함으로써 지원은 가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의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유아교육 부분이 우리 저출산율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먼저 EBS 수능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BS 수능강의 국고보조금이 2005년도에 137억이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 잡은 것보다 실제 집행액에서 차이가 난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결산할 때 구체적으로 알고 나오셔야지요?

저한테 온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3억 9900만 원 정도가 더 초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항목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

○**이경숙 위원** 알고 계신 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EBS에 137억 원을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 10억 원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이 다 뒤에 와서 결산을 받고 있는데요, 137억 중에서 이렇게 결산 집행액이 다를 때 승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대답을 빨리 해 주셔야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받은 기관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아마 EBS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할 때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예.

○**이경숙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고 고쳐야 되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그 부분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했습니까? 현지조사는 나갔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국고보조금 137억이면 교육부 산하기관 어떤 데보다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었을 때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현지조사를 나갈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아무 조치를 안 했지요,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 확인감사 때까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의 인터넷 강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를 한 이유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경숙 위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EBS 교재가 원가의 5배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 부분이 조금 부풀려져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쇄비의 5배로 되어 있고요, EBS의 이윤은 25%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득이 2005년도에 117억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의 목적하고 이렇게 이득이 발생한 것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더 낮출 수 있으면 그것이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방송공사가 보고한 자료……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부에 8월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런 교재에 대해서는 가격범위를 4000원~6000원으로 한정하고 최대 6000원이 넘지 않도록 정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6000원이 넘는 교재가 40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보고한 것과 지금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재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못 했습

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께럽에서 조사한 바로는 월 4만 5000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4만 5000원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49.2%였는데 2005년도에는 29.9%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나온 것이 EBS 인터넷 강의인데 이렇게 실제 교재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폭리를 취했던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교육부가 일정 정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래서 올 2학기부터 교재가격을 15% 인하하도록 했고요, 내년부터는 학부모·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재가격산정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EBS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EBS 인터넷 강의를 문제가 되니까 EBS가 국회에 나와서 2004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절대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인건비로 전용이 되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경숙 위원** 이렇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집중적인 평가와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EBS 이사회에 교육부에서 추천한 2명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총에서 1명을 하고 저희가 1명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교육 관계 인사들이 2명이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경숙 위원** 이번에 EBS가 이사회 교체하는 시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난번 이사가 제 역할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추천한 이사가 감사원 감사회의 때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 이사가 가서 이렇게 과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반해서 했을 때는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발언을 한 줄 아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라” 이런 발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EBS 수능강의의 목표에, 취지에 얼마나 맞게끔 했는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파견한 이사가 어쨌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지적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단체에서 참가한 사람은 중요한 감사원 보고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137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철저하게 역할을 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임해규 위원님께서 BK21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 마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BK21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통장을 학생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됐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학생 계좌로 돈을 넣어 줘도 그것을 다시 지도교수가 빼 간다든지 통장을 지도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을 교수들이 간수해요. 아무리 학생한테 보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교수 본인들이 간수를 하느냐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야지, 교수들도 비도덕적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교수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은 교직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가 가지고 서면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도 국립대학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좀 사업대학으로 확대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교육부 세출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연간 한 27조 5000억 정도로 국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일 부처 중에 이 정도 규모면 몇 번째쯤 해당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제일 큼니다.

○**주호영 위원** 국방부보다도 많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예·결산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은 행정부 내에서 기획예산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있을 테고,

또 국회가 있을 텐데, 이런 관계되는 기관 3개와의 관계에서 예·결산에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차관이 파악하고 있는 교육부 예·결산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것, 그다음에 자체 예산제도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산처하고의 관계에서 결산은 저희가 집행결과가 나오면 그 집행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그다음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감사원하고는 특별히 연계성 문제가 있을 건 없다고 봅니다.

국회하고의 관계에서도 지적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다음 정책 수립하는 데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드릴 것이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저희가 다음연도에 사업을 초기부터 하려면 사업계획 수립이 이미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다음연도에 이 예산이 성립될지를 판단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 사업을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결산에서도 많이 지적되는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1월부터 매년 전반기에는 거의 예산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 것 빼고 전체적으로 22조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거든요. 예산 배분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부터 많을 텐데, 내부적으로 어떤 가치기준에 의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고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 필요하다 하니까 예산 좀 쥐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고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

까, 아니면 예·결산제도 자체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체크시스템이 있어서 문제 있는 제도가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 있으면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수치나 이런 것으로서 정정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산은 톱다운 방식으로 총액을 부처에 주고 그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성과가 적다든가, 각 실·국 간의 예산 편성을 위해 반영하는 노력들에 있어서 성과가 적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리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실한 것이 나왔다, 그래서 지적된다든지 회수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회수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못 하도록 취소한다든지 이것 이외에 거기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예산이라든지 어디에서 무슨 불이익을 줘야 좀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다가 문제되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하면 다음에 그게 시정되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이미 선정되어서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 해당되는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심하면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예산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될 사항이 나타나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컨대 건설회사에 ‘산업안전 좀 지켜라’ 하는 의무를 부과해 놓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사망 사고가 나면 몇 점, 몇 점 이래서 그 점수가 일정 점수가 차면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 커다란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이면 대학 주체별로 예산 관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그것이 조직적으로 그 그룹 안에서 관리하고 주의를 하지요.

누리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인데 문제가 있으면 줄이든지 이렇게 해 버리고 그것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전 조직원들로 하여금 예

산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대로 집행해 가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학에 대해서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행·재정 제재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심의에 올려 가지고 제재대상 대학으로 묶이게 되면 증원을 한다든가 각종 교육부의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데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호영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수로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냥 거기에 회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 건, 중요한 건이 있을 때 그런 절차를 취하는가, 아니면 매 건이 있을 때마다 점수를 내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그렇습니다. 건별로 하고 있고, 개별 대학에 대해서 그것을 누적적으로 DB화를 해서 그렇게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 회계 검토 사업 있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주호영 위원** 예산 1억 2200만 원을 지출해서 10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 검토를 회계법인에 의뢰했고, 그 결과로 83억 5500만 원을 회수하고 여러 사람을 징계조치한 것으로 나오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주호영 위원** 이것 효과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사립대학 전체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고안하게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법 제·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서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방형이사 제도라는 것이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학 비리 문제에 관해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한 84억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인 제도인데, 결국 사학의 비리를 없애기 위한 거라면 굳이 쟁점 있는 개방형이사제도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사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개방형이사제를 그런 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리 방지를 위해서 개방형이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의사를 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서로 헌법적 문제까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 제도보다는 이렇게 논란 없고 명확한 제도부터 자꾸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리사학 들어가서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만 제대로 제때 미리 시행하고 널리 시행했어도 그런 필요성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 검토라든가 저희 교육부의 감사는 사후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이사제가 운영된다면 사전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호영 위원** 아니, 보세요! 개방형이사제도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교육부 최초 입장이 뭐였어요? 지금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부의 감사인력이 전부 몇 명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주호영 위원**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더 늘려야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당국을 설득해서 감사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감사해야지 지금 사립대학들이나 이런 데 분규 있는 것 보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교육 감사 당국에서 호지부지하다가 결국 사법처리될 정도 되면 그때야 특감이니 이런 것을 보내 가지고 가리듯게 하고 하나까 국민들이 늘 생각하기에 교육당국이 사학의 비리를 오히려 감싸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통계수치나 이런 것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같은 데서 늘 사학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백업을 해 주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사법처리되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고 구성원들이 데모하고 농성하고 이 정도 되면 특감 보내 가지고 그때 특감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수년째 굶아 터진 것을 그때 와서 까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학의 회계 부정이나 비리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감사인원을 더 늘리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교육부가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제3의 기관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원에 특별국을 두어서 사립학교만 감사하는 국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교육관료와 사학운영자들의 인적 관계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제도라도 고안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의 감사인력을 늘려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저희가 1개 과를 늘렸습니다. 사립대학 감사를 위해서 도저히 일손이 모자라서 1개 과를 늘렸는데 그렇게 해 봐야 1년에 10개 대학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리면 안 되겠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감사인원을 늘리는 비용보다도 사회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면 그쪽으로 빨리 관계당국을 설득해서 감사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부는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예산을 모두 해외경상이전비로 편성 집행하고 있네요. 이것 왜 이렇게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과목을 광의로 해석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국외여비나 외빈초청경비는 한 푼도 없어요. 이런 것 자체가, 물론 해외경상이전경비로 그 항목을 처음부터 넣어서 그렇게 지출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번지수도 못 찾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대번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혁신위원회 관계되는 위원이나 직원들이 용역사업의 대부분을 받아 가지고 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전문위원들이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주호영 위원** 무슨 과제가 있을 때 전문위원이 그렇게 전문가라면 용역을 주지 않고 그것을 과업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까? 일상적인 일로 이것 좀 연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시골 말로 문둥이가 제 돈 내고 제 떡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용역 주면서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써 내고 돈 받아 가고 이러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고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지는 않았고요……

○**주호영 위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역에 참가하면 무슨 연구비라든가 뭐라도 받아 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전문위원들이—자기 월급 이외에 다른 연구용역과 관계된 용역비를 한 푼도 안 받아 가고 봉사하기 위해서 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權哲賢** 정리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일일이 다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고, 교육부의 예산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 짚어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차관님께 하나 여쭙 보겠는데요, 감사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건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곤란함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한계가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개방형이사라는 것이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분이 개방형이사로 참여함으로써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처럼 어찌 보면 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자치를 증진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감사인력을 늘리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인력을 무한정 늘리면 개방형이사를 안 뒤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이사가 비리 방지 목적도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개방형이사가 사전적으로 그런 부당 운영을 방지하는 거라면 감사는 사후적으로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 아직 일선 학교들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도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전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2004년부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결과를 보니까 역사왜곡 대책으로 투자한 예산이 한 72억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어찌 보면 좀 외로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데 비해서는, 물론 동북아역사재단이 곧 출범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도 문제라든지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된 성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강조한 데 비해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마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이 못 오시고 부원장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초등학생용 역사 교과서인데요, 이게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역사를 배우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점유율이 한 60%에 달하는 책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국 전체 소학생들의 60%가 이 책으로 공부한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분명 석굴암 사진인데 그 옆에 사진 설명이

“일본 고대의 거대불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쓰이고 있으니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바로잡히게 된 과정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인민교육출판사에 제기를 했고 사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좀 뒤늦게 이 작업에 참여해서 제가 아직 수정된 원본은 못 봤고 이렇게 복사본만 팩시밀리로 받았습시다만, 한국 고대의 석가모니좌상 이런 식으로 사진 설명이 좀 수정되어서…… 석굴암이라든지 하나의 고유명사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체 점유율 한 60%에 달하는 그런 책인데, 일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근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국제학교의 4학년 사회교과서에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든지…… 아시겠지만 타슈켄트는 우리 까레이스키들의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요, 국제학교는 다른 외국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인데 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우리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증서** ……

○**유기흥 위원** 아무나 답변하시지요.

이것이 한 10억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4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3년에 16억, 2004년에 18억, 2005년에 10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까지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팀이 있습니다. 팀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1년짜리 계약직 연구원들이지요. 이것은 부원장님이 잠깐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셨나요?

대략 250개 교과서를 이 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부원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6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1년짜리 계약직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부원장 이광호** 예, 다 임시직입니다.

○**유기흥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중국, 한 사람이 일본, 한 사람이 아메리카, 한 사람이 유럽, 나머지 두 사람은 한국 이해자료 개발 해서 이 6명 가지고 이런 작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부원장 이광호**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예산이나 그 예산에 따르는 인원이 매우 부족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도 2005년에 아홉 차례에 불과하고, 인민교육출판사를 한 번 방문하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부원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래서 그나마 바로잡아진 것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것을 발견한 것이 유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다라는 것은 다들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북아역사재단이 곧 출범하고…… 이런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들이 앞으로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이 점 열심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이만열 위원장께서 유영렬 위원장으로 바뀌시고 오늘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해외소재 한국학 관련 사료의 이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 파악은 대체로 좀 되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렬** 수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대체로 큰 사업을 뭘 하고 있는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유기흥 위원**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실제로 국민적 관심들이 굉장히 높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렬**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오대산 실록이 얼마 전에 돌아왔고,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도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이나 사료들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하

고 있는데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국사편찬위원장 유영렬**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유기흥 위원** 대개는 자료를 원본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내셔널아카이브에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지금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렬** 해외사료는 저희가 미국, 일본, 러시아, 중요한 각국 우리 한국 관계의 자료가 있는 곳에 해외사료조사원을 위촉해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곳에는 방선주 씨를 해외사료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평소에 중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지요.

○**유기흥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런 사료들의 사본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까지 나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일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중요한 해외에 있는 사료들을 국내로 이전해 오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렬** 저희도 해외사료를 수집하고 원본도 가져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20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대인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위원님들께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사료를 제대로 수집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흥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1억 5000만 원 해서 설명회를 하고 평가 매뉴얼을 작

성하고 한 사업이 있지요, 차관님?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유기흥 위원** 이것 외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각 학교별 2000만 원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해서 67개 교, 교원평가사업에 대한 시범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우리 교육위 전문위원께서 이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교금 지원을 재고해야 된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원활한 시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학급 수 3개, 10명의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 수가 37명인 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38명에 선생님 10명인 학교, 그리고 학급 수가 45개, 교원 수가 원세 분, 학생 수 1819명인 초등학교, 또 학생 수가 1600명인데 학급 수가 48개, 교원 수가 100명인…… 이 학교들이 다 똑같이 지금 2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유기흥 위원** 이것은 얼핏 보기에선 선생님 수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10명이고, 한쪽이 100명인데 획일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교원평가사업하고 또 하나 선택 과제를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과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봤고요.

하여튼 1차 연도는 초기 연도로서 똑같이 지원을 했고, 2차 연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평균 1000만 원으로 하는데 대규모 학교는 1200만 원, 소규모 학교는 8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첫해니까 그랬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생 수나 교원 수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좀 차질 없이, 이것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그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들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은 임해규 위원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니까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십시오.

○**임해규 위원**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아까 나누던 이야기를 좀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BK사업을 제가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죽 얘기를 나누고 학진에 있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깐요,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자 재현인데 사실상 대학원생들에게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라면 우리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매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 저는 교육부총리 그것 할 때도 많이 헛갈렸어요, 자꾸 그냥 장학금 준다 그러고 교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왜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21이에요? 뭔가 우수한 두뇌를 개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한 두뇌가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연구를 해야 브레인 코리아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야지 국제적인 석학들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맞는 취지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맞게끔 되고 있는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업을 주도하는 교수의 연구 역량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쓰셨나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제대로 되어야 학생들이 똑똑해지니까.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예.

○**임해규 위원** 거기에 공감을 이룬다고 하면 저는 인문사회과학의 경우로 제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과학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의 경우에 실제로 특정

한 사업단으로, 즉 지난번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방행정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지방행정 경영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지요. 그 연구비를 받는 학생들과 함께 그 연구사업을 저를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연구사업의 결과로 성과를 하나 내야지요. 다시 말하면 그 연구사업 제목에 걸맞은 프로젝트를 적어도 1개 이상은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국내외 유망한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그게 못 실리면 그 연구사업은 실패한 것이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영문으로 실린다면 그 사업은 정말로 성공한 사업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BK21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평가도 객관적이고 명확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그 사업과 관계없이 쓴 논문, 교수가 그 사업과 직접 연관 없이 쓴 논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자기가 한 거라고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도 없잖아요. 또 그것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 제언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BK21 2단계를 하니까, 이 BK21은 그야말로 ‘두뇌 한국’을 만드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인 코리아’ 사업을 진짜 하시려면 그 사업에 걸맞은 사업과제를 분명히 하고, 또 그 사업비 예산의 75%를 인건비로 주지 말고 적어도 한 30% 정도는 프로젝트비로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교수님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고 돈을 쓰고 학생들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고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건비와는 별도로…… 그런데 지금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것을 전부 다 장학금으로 다 출연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50만 명 받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50만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장학금 받도록 해 주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업 목표에 걸맞은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러한 평가의 잣대가 없음으로 해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이종서** 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학술연구 조성사업을 연구프로젝트 수행으로 2900억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BK에

서 그러한 학술연구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학생들 장학금까지 같이 준다면 이 사업비를 아마 서너 배로 키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브레인 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는 교수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특성화 분야의 과제를 내고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교수를 뽑아서 그 밑에 우수한 제자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우수한 학생을 기를 만한 연구역량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부득이 그 사람의 연구업적을 보고 그 교수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지난번의 전 부총리가 그런 사업의 기획과 의도 때문에 그런 희생자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도 생각하듯이 그 분야에 정말로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키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했어요. 그때 본인이 다 시인했잖아요.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받은 돈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쓴 논문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BK사업의 목표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학금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정한,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것 특히 대학원생에 있어서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교수와 학생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야말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학원생에게 그냥 장학금 준다고 해서 스스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물론 박사논문을 쓰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좋게 성장하겠지요.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박사논문 어차피 써야 될 테니까…… 그런데 특별히 ‘브레인 코리아’라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준다면 그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사업이 목적이 분명해야 평가도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평가원으로 참석했던 여러 패널 교수님들하고 제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거의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수님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야만 저는 BK사업이, 2단계에 앞으로 또 2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만 2조의 돈이 그렇게 쓸데없이 소진되지 않는다, 목적 외로 소진되지 않는다, 물론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고유의 의미를 찾으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정말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임해규 간사님과 유기홍 간사님이 몹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항상 질의 시간도 제일 마지막에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도저히 질의 안 하시면 안 될 것 있으시면 하나 하시고……

○**김영숙 위원**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주호영 위원** 제가 지금 오늘 출석한 분을 보니까 대학병원장님들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열두 분 출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다 올라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을 하니까 아마 다 해당되니까 올라오신 것 같은데 과연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하루종일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오늘 질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출석범위를 정할 때, 아마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안 나온다고 하기 쉽지 않으니까 간사님들이 잘 좀 협의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출석은 안 나와도 되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哲賢**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첫 회의 할 때도 대학병원 관계자들에게 별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때는 출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학병원에 질의할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대로 뒀습니다만 주호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김홍일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정문

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홍일 위원께서는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국회법에 위원장이 허락하면 서면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장을 고려해서 서면질의를 허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오후 2시에 양당 간사 간에 결산 심의한 것에 대해서 토의가 있기 때문에 성격상 내일 오전 중에 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만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겠지만 관계기관에서 내일 오전 중에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호영 위원께서 아침에 요청했던 전년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것들에 대한 처리내용, 또 감사원에서 교육부를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 또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걸 감사원에서도 감사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결산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로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산 심의를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보고하는 그런 관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상임위원회를 다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책자로 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시정요구서안을 중심으로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일 11시 반에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서 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그

리고 오찬을 함께하고 나서 오후 2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철현	김교홍	김영숙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
이군현	이은영	이주호	임해규
정문헌	정봉주	주호영	최순영
최재성			

○청가 위원(1인)

김홍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구기성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이종서		
차관보	김광조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학교정책실장	황남택		
인적자원정책국장	김경희		
평생학습국장	김정기		
대학지원국장	황인철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병현		
재정기획관	변창률		
학교정책국장	김홍섭		
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대학혁신추진단장	곽창신		
감사관	김은섭		
기획홍보관리관	엄상현		
비서실장	김응권		
울산국립대추진단장	황지현		
학교정책추진단장	심은석		
혁신인사기획관	김영준		
운영지원팀장	이지한		
대한민국학술원	권진수		
사무국장	임승빈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나종화		
국제교육진흥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	선	규
국사편찬위원장	유	영	렬
○기타 참석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박	판	영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	학	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	영	식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사무총장	이	기	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황	대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	삼	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	상	만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이	광	호
부산대학교병원장	김	동	현
전남대학교병원장	김	상	형
충남대학교병원장	노	홍	태
충북대학교병원장	김	승	택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	범	석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성	명	훈
강원대학교병원 진료처장	정	일	영
경북대학교병원 사무국장	김	병	호
경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황	수	현
전북대학교병원 사무국장	임	영	환
제주대학교병원 사무국장	강	철	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백	승	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2006. 7. 20 최순영 · 장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엄호성 · 이영순 · 정동채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7월 21일 회부됨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 ·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6. 7. 26 이기우 · 장향숙 · 최규성 · 문병호 · 백원우 · 양승조 · 장영달 · 강기정 · 이인영 · 한병도 · 문학진 · 우원식 · 장복심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 ·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6. 7. 26 이기우 · 장향숙 · 최규성 · 문병호 · 백원우 · 양승조 · 장영달 · 이인영 · 한병도 · 문학진 · 우원식 · 장복심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 ·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06. 7. 26 이기우 · 장향숙 · 최규성 · 문병호 · 백원우 · 양승조 · 장영달 · 이인영 · 한병도 · 문학진 · 우원식 · 장복심 의원 발의)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7. 26 정부 제출)

이상 4건 7월 27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6. 8. 17 이경숙 · 김춘진 · 민병두 · 백원우 · 서혜석 · 신상진 · 엄호성 · 유기홍 · 이계경 · 이해봉 · 장향숙 · 최규성 · 홍미영 의원 발의)

8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6. 8. 1 김재윤 · 민병두 · 엄호성 · 김명주 · 안민석 · 이계경 · 장향숙 · 황우여 · 박명광 · 임종인 · 박상돈 · 강창일 · 안상수 · 노웅래 · 김종률 · 김동철 · 유선호 · 신중식 · 송영길 · 손봉숙 · 이상경 · 이종걸 · 전병현 · 이광철 · 신기남 의원 발의)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